



문서번호 : 25-09-민생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전송일자 : 2025. 09. 09.(화)

전송매수 : 총 4매

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

일시 장소 : 2025. 9. 9.(화) 오전 11시, 향린교회

1. 취지

- 국내 제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가 인수 후 탈법적·투기적 경영을 이어오며, 최근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손 털고 나가기’식의 폐점청산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123개 대형매장을 운영 중이며, 폐점 시 직·간접고용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 협력·외주업체, 납품업체(1,800여 개), 입점업체(8,000여 개)까지 줄도산 및 대량 실업 사태가 예상됩니다. 주변 상권 공동화, 부동산 가치 하락, 유통공백 및 식품 사막화 등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9,000억 원 손실 위험과 더불어 실업급여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MBK의 문제 행위

- 기업회생 신청 전 사기성 채권 발행
 - 2025년 3월 4일 회생 신청 직전까지 사실을 은폐한 채 수천억 원 규모 전자단기채권(ABSTB) 발행.
- 무리한 인수 과정
 -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자기자본 30%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홈플러스 명의로 차입(LBO).
 - 이후 알짜 점포 20개를 매각해 차입금 상환 후, 다시 고율 임대료(연 8% 이상) 부담 구조 발생.
- 고율 금융비용 전가
 -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연 14% 이자, RCPS 13% 배당 등 과도한 비용 구조.
 - 그 결과, 노동자들의 성과는 모두 외부 유출되고 영업적자가 구조화됨.

4. 요구 사항

- 정부 조사 및 처벌
 - 금융감독원·검찰이 MBK의 탈법·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인수 과정 및 사기성 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
- 국회 청문회 개최
 - 정무위원회 합의 사항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어 MBK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투자 약속 이행 강제
 - MBK가 인수 당시 약속한 1조 원 투자를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 공적 인수 방안 모색
 - 농협 등 공적 주체가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농산물 유통 개선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 회생법원 처리 시 사회적 고려 반영

- 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단 중심이 아닌, 노동자·임점업주·지역경제 이해관계를 반영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5. 결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 기업 문제를 넘어 **10만 명 이상 고용, 국민연금 손실, 지역경제 붕괴**와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사안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 붙임1.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현재까지)
- ▣ 붙임2. 참가자 주요발언
- ▣ 붙임3. 공동선언문
- ▣ 붙임4. 공동선언 사진
-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1 :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현재까지)

함세웅 (원로 신부)

김상근 (원로 목사)

김중배 (원로 언론인)

이부영 (원로 언론인)

정강자 (전 참여연대 상임대표)

양길승 (의사,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전민용 (치과의사, 유월민주포럼 대표)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대 (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상임대표)

윤준하 (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신학철 (화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영찬 (전국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해용(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박석운 (홀플러스정상화대책위 상임대표)

이흥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문국주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다은(한국청년연대 전국대표)

최취주(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박명숙(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김미영(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표)

남춘미(대구여성노동자회)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의장)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의장)

김제남(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임상호(울산 진보연대 의장)

이병하(경남진보연합 의장)

이대동(대경진보연대 대표)

강내희(중앙대 명예교수)

강선순(유가족협의회)

강형철(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고광현(시인)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권낙기(통일광장)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봉준(화가)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사이버노동대학 대표)

김영옥(자주연합준비위원회)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준권(화가)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상현(민주노총 지도위원)

노수희(자주연합준비위원회)

단병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순희(70민노회, 원풍모방)

박용일(변호사)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명예의장)

백도명(서울대 명예교수)

소순관(전국노점연합 고문)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학철(화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신흥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심정수(화가)
안재웅(목사, 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양규현(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길승(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염성태(자주연합준비위원회)
유영표(71동지회)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회장)
이수호(사단법인 풀빵 이사장)
이해동(목사)
이해학(목사)
임진택(판소리 명창)
임현영(문학평론가)
장남수(유가족협의회 회장)
장영달(민청학련동지회)
장임원(전 민교협 상임공동대표)

정동익(동아투위)
정지창(평론)
정태효(목사)
정희성(시인)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현정(목사)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한상렬(한국진보연대)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박홍섭(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용삼(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림구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용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희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붙임2. 참가자 주요발언

[원로 발언]

- **함세웅 원로 신부**
: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상생 문제라 강조.
성경 가르침을 인용해 “탐욕적 자본은 인간답지 않다”고 비판.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며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확신.
대통령에게도 관심과 개입을 요청했다고 언급.
- **김상근 원로 목사**
: 한국 사회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약자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지적.
과거 고공농성·노사 갈등 사례도 정부가 나서 해결됐음을 상기.
노사 자율 해결 문화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

[각계 대표 발언]

- **박석운 홈플러스 공대위 상임대표**
: MBK의 인수 자체가 “야바위판” 같은 투기라며 강하게 규탄.
검찰은 고발 6개월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고 비판.
MBK가 시간 끌기 끝에 폐점·청산으로 돈만 챙길 것이라 우려.
농협 등 공적 인수로 상생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홈플러스는 국민 모두의 생활 인프라이자 시장이라 강조.
MBK와 국민연금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전 국민 피해 가능성 경고.
정부가 실행할 5대 과제가 이미 정리돼 있다며 즉각 이행 요구.
“당연한 요구이며 정부는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당사자 발언]

-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 노동자들은 단식·식발·노숙·부상까지 감수하며 싸워왔다고 증언.
MBK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며 수천 명을 버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
회생 법원과 국회가 모두 침묵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10만 명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
-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
: 입점주들은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일방적 폐점과 미비한 보상만 받는다고 호소.
매출은 최대 50% 감소했고 정부 지원 정책에서도 배제돼 피해가 가중됐다고 지적.
MBK는 자구 노력 없이 청산가치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
정부 주관 협의체 구성과 MBK 불법행위 수사, 1조 원 투자 이행을 촉구.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갑시다.

전국 각지에서 123개의 대형매장을 운영중인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홈플러스는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침인 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추진 방침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점포 폐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인 MBK가 손털고 나가는 방식, 즉 폐점청산의 길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홈플러스가 폐점청산하게 된다면, 홈플러스 직영 직원 2만여명, 간접고용 8-9만명 등 총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협력·외주업체 직원들의 실업은 이미 진행중이고, 1,800여개의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손실로 중소기업체 도산사태가 속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총8,000여개 입점업체의 입점주와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중소상인인 이들 입점업체의 시설투자비와 판매대금 손실도 마치 눈사태처럼 확대될 것입니다.

대형 매장 주변 상권도 공동화현상과 매출하락이 발생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농후하며, 유통공백과 식품사막화 현상과 함께 부동산 가치도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의 엄청난 타격을 불러 올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사모펀드 MBK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국민연금 9,000억원의 투자손실이 예상되고, 대규모 일자리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등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한편, 사모펀드 MBK측이 저지른 각종 탈법, 위법 행위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제2위 대형마트 회사인 홈플러스가 지난 3월4일 갑자기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직전까지도 신청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같이 숨긴채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채권(ABSTB)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 인수자들은 홈플러스측의 사기적 채권발행 때문에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10년전인 2015년에 사모펀드인 MBK가 국내 제2위 대형마트 업체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이 결정적인 눈물의 씨앗입니다. 당시 국내1위 업체인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6.4조에 불과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인 홈플러스를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인 영국기업 TESCO로부터 인수하는 대금이 7.2조로 과다 책정된 것도 매우 이상하거니와, 그 7.2조의 인수대금도 자기 자금은 2.2조(30.56%)만 투입하고, 나머지 5조(69.44%)를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서 조달하였습니다. 이른바 LBO(차입매수) 방식이라고 명명하고는 당시 선진 금융기법이니 뭐니 하면서 진상을 호도하였지만, 실제로는 봉이 김선달 방식의 사기술이나 다름없다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MBK인수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시 차임금 상환을 위해 총 20개에 달하는 알짜 점포를 매각하여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인수차입부채를 상환하였는데, 그 대신 그 점포에 대해 고율의 임대료(연8%이상)를 지급하는 이른바 세일앤드리스백(임대매각) 방식을 실행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MBK는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연14%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 인수금융에 활용된 상환전환우선주(RCPS)에는 연 13%의 배당을 제공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이자 비용이나 배당비용, 그리고 임대료 때문에, 그 사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등골 빠지게 열심히 일한 성과는 모조리 외부로 빠져 나가버리고도 상당 수준의 영업적자가 구조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요청드립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이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행한 각종 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조사하여 의법처단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수당시 자금의 흐름을 실사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상이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 등 정부당국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준비 사실을 숨긴채 직전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채권을 사기발행한 범죄에 대해 의법처단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6개월 전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집행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로, 국회청문회를 개최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3월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청문회개최를 합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MBK의 책임을 규명해 내면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재발방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셋째로,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속했던 1조원 투자 약속을 이행토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낮추게 되면, 홈플러스 회생 및 M&A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농협 등 공적 방식으로 홈플러스 인수도 고려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홈플러스를 책임있게 운영할 의지나 조건이 되는 유통기업 등을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물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농협이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기존의 농촌지역이나 소도시 위주로 구성된 하나로마트 유통체계에서 대도시로의 유통망 개선·확장을 모색한다면, 농산물 등 식품의 유통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또 물가안정 등의 공적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로, 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을 논의하고 인가할 때, 사모펀드인 MBK나 대형 채권단인 금융기관 위주의 처리방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노동자나 입점업주의 고용이나 영업 승계, 지역경제 상황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반영한 M&A나 회생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칫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길로 나아간다면 실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크게 멎게 될 위험이 현존한 상태입니다.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마련되기 어렵지 않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앞장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사회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자 일동

□ 붙임4. 공동선언 사진

	
함세웅 원로 신부	김상근 원로 목사
	
박석운 홍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안수용 마트노조 홍플러스 지부장	김병국 홍플러스 입점주협회 회장



왼쪽부터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